

식품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식품 부조리 실태 및 예방방안 중점 -

A Study on Penal and Legal Issue of Food Crimes

이만종(Lee, Man Jong)**·최은희(Choi, Eun Hi)***

ABSTRACT

As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well-being to lead a happy and healthy, food related to well-being are increasingly being produced and sold.

Food,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of human life, is directly linked with health. Up to now, food has been considered a means of survival, however. Due to diversification, advancement, and specialization of demand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food is closely related to one's dignity and social status more than ever before.

Additionally, as trend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od change, food-related crimes not only have become sophisticated, but also have multiplied. As a result, damage to the living of people is on the increase.

For that reason, it becomes more and more crucial to promote institutional devices to boost food-related industries while controlling food crimes that bring more harm than good to public safety and public health.

Figuring out how to protect consumers from food crimes, how to understand prescriptive elements of violation and how to punish violators of offences is a vitally important issue.

In this thesis, causes of food crimes will be examined and analyzed and theories regarding criminal law will be offered accordingly.

key words : 참살이(Well-being), 식품범죄(Food crimes), 형사상(penal), 소비자보호(protect consumers)

I. 서론

우리가 먹는 식탁이 유해 식품으로 넘쳐난다는 그동안의 우려와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식품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해 식품의 범람이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또는 가짜식품은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불량만두 파동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중국산 납 꽃게, 농약을 뿌린 콩나물, 황산참기름, 방부제 목, 포

* 본 논문은 2008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 경찰학부 교수

*** 경민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

르말린이 든 두부, 백신실험 개고기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과 칼날 참치 캔 파동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식품 범죄가 발생 할 때 마다 정부가 소란을 떨며 경찰, 검찰권 까지 동원해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강한의지를 보여 왔으나 여전히 식품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처벌법규가 경미한 것인지, 정부의 척결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유해식품에 둘러싸인 국민들은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두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곧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즉 식품범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 보다는 돈벌이에 눈이 먼 이 같은 행위는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제는 이와 같은 식품범죄는 단순히 기업윤리 의식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다 할 수 있다. 이제 먹거리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부정·불량식품의 추방과 식품의 안전성·건강성의 확보는 단순히 개인 건강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¹⁾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로서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품 범죄에 관한 원인 및 실태 분석과 부패요인 이에 대한 형사법적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타당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식품 범죄예방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한다.

II. 식품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식품 범죄의 개념

식품범죄는 법률상용어는 아니지만 식품의 위생을 해치는 범죄라고 간단히 개념정의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식품(food)이란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의약적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의 제조, 생산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 까지 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및 완전무결 성 을 확보하기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품범죄는 식품 위생법을 모범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수법령에 규정된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실무상 개념 이다.²⁾

1) 심영희, “식품범죄에 관한 범죄 사회학적 분석”, 식품공업, 96호, 1988, 37면.

1) 협의의 식품범죄

협의의 식품범죄로는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손해와 구체적 위험을 발생 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음용수에 관한 죄, 식품위생법상의 유해음식제조·판매 등의 죄가 이에 속한다.(서울지방법검찰청, 1995:5)

2) 광의의 식품범죄

협의의 식품범죄의 개념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실해(實害)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단속 법규에 위반하여 식품위생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식품 위생법상의 무허가 식품접객 행위등 대부분의 식품 위생법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서울지방법검찰청, 1995:6)

3) 최광의의 식품범죄

광의의 식품범죄개념에 식품 위생에 관한 단속법규중 식품위생과 직접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 시킨 것이다.(서울지방법검찰청, 1995:7), 예를 들면 식품 위생법 제30조 소정의 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보건 복지부장관의 제한에 위반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2. 식품범죄의 유형

식품범죄는 실무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우리가 먹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식품에 관한 것과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부정식품사범은 그 식품 자체의 유해성으로 인해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범을 말하고,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범은 식품 위생법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당국의 허가 및 신고들과 관련된 사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을 허가유무 및 유·무해에 대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부정식품 사범, 불량식품사범 및 유해식품사범으로 구분하고 있다(서울지방법검찰청, 1995:7). 이와 반면에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범 중에는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사범이 주종을 이루는바, 특히 식품 접객업과 관련된 일련의 식품 사범을 실무상 식품접객사범 이라고 부르고 있다.³⁾

- 2) 형법상에는 음용수에관한죄(제16장), 상해죄(제257조), 과실 치사상 죄(제266조),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제268조)등이 식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나,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을 예상하고 입법 된 것은 아니다.
- 3) 식품사범은 식품위생법 및 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의율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과 관련되어 인체의 생명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 과실치사상의

1) 부정 식품 사범의 종류

부정식품사범은 그 식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식품제조업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설계상 하자에 의한 사범과 제조상의 결함 표시 상 하자에 의한 사범으로 대별할 수 있고, 제조된 결과로서의 식품자체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부정·불량·유해 식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⁴⁾

2) 식품접객사범의 종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과 관련된 신고, 허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사범을 말하는 것으로接客업이란 식품영업(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에 개념 정의됨)중 식품판매에 중점을 두는营业을 말한다. 식품接客사범이 전체 식품 위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외식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일반식품 사범과는 달리 식품자체 보다는 그 식품을 취식하는 양태에 따라 영업 허가 등 의 차이가 있어 그 보호 법익이 사회 풍속과 관련된 점이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92도699호 판결 등).

3) 기타 식품부조리사범

이외에 식품사범과 관련된 것으로 식품수입과 관련하여 검역 등의 제반 문제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인허가, 검사,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주간 ‘봐주기식’ 불법유착관계가 만연해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업주의 부패유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반부패특별위원회:2000).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소비자 보호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이 있다.

III. 식품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징

1. 식품 범죄의 발생원인

식품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이 무허가로 제조·판매,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상이 및 과대, 허위선전, 식품제조 및 취급자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미비, 허가사항 대로 제조 하지 않고 값싼 원료로 제조하고 있는 점, 식품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위생적 관리주의 부족, 소비자의 저질, 염가식품 선호 및 고발

형법범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4) 부정식품이란 개념은 유해식품까지를 모두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유해 식품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용어이다

의식부족, 판매하기전의 식품검사 불철저,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상태 불량, 식품의 운반보관 상태불량, 보균자의 식품제조 참여, 관계기관 담당자의 업무철저 미흡, 허가·감독기관의 다원화 등으로 볼 수 있다.⁵⁾

2. 식품범죄의 특징

1) 공공의 안전침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식품관련 범죄만 보더라도 2003년의 학교 급식사건 2004년 불량만두소 사건,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 기생충알사건, 2006년 학교 급식의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사건까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한 것을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식품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인간에게 직접 위해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수단이 식품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 신체 및 건강에 위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표1>시대별 중요 식품 사건

연대	주요 식품 사건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에 표백제 사용사건 · 포항포도주 formaldehyde 검출사건 · 백화양조 메칠 알콜 초과 검출 · 카바이트 막걸리 사건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제콩나물사건 · 횡가루두부 사건 · 시중우유 대장균 오염사건 · 환만 식초 방부제 사건 · 수구레 즉편제조사건 · 항생제사용 누룩사건 · 황산 알미늄 사용 성게 젓사건 · 학교 급식빵 집단 식중독사건 · 파라치온 오염 번데기 중독사건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가초가 식용유 사건 · 가짜 꿀사건 · 불량냉면용 국수사건 · 불량 고추장, 두부, 유지, 후추 가루, 새우젓사건 · 가짜외제 분유 사건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짜양주 사건 · 수입자몽 농약사건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만두 사건 · 학교급식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사건

※자료 : 대검찰청, 과학수사 편람, 198쪽 참조

5) 이에 대하여는 1988.6.17일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제4회 형사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명로승(대검찰청)의 발표내용을 참조함.

이는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고도의 산업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산업공해 와 함께’ 이른바 ‘식품공해’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 기업 · 영업법적 성격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투자비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업적이고 영업법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4) 기술성 · 전문성

식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기술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이 뚜렷하다. 따라서 범죄자의 이러한 기술수준과 전문성을 추궁하여 그 위법을 밝혀내기 위하여 는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전문성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 · 공립의 전문적 검사 및 감정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청된다. 아울러 식품범죄의 이러한 특질은 식품 범죄 단속 법규의 제정과 개정에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법익 침해위험의 현저성 및 급박성

식품범죄 특히 유해 식품의 경우에는 공중의 생명, 신체, 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또 피해의 발생이나 발생위험도 신속하기 때문에 범죄의 발견, 수사, 단속 처리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또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발생 이전, 즉 사전에 예방 · 진입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서울지방검찰청, 1995:28).

6) 국제적 유통성

식품의 국제적 유통이 급증하면서 우리가정의 식탁도 많은 수입식품으로 채워지고 있어 ‘식탁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납조각 에 오염된 중국산 꽃게와 조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악덕상훈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함께 선진국의 발달된 식품 분석 및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단독기술의 도입 또한 시급하게 논의 되어야 할 과제이다.

IV . 식품범죄와 관련된 형법적 이론

1. 과실의 문제

형법상 과실범은 행위자가 객관적 주의에 위반하여 구성 요건을 실현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 주의의 위반」이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위의 위반」이라고도 하며, 구성요건의 실현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데 이 위험을 고려하여 명하여진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김 중원, 1981:338).

따라서 과실범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된다(형법 제14조)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식품 범죄단속 법규상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식품범죄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과실범의 처벌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범죄역시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에 과실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형법 제13조)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수251판결). 또한 과실범 불인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범의 규범성을 확장하자는 신 과실범설(위구감설)⁶⁾에 대한 도입논의 역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된다.

2. 신뢰의 원칙 문제

신뢰의 원칙(vertrauens - grundsatz)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수인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경우, 각자에게 그 기여한 바에 따라 적절한 위험부담을 분배한다는 적정한 위험 분배의 법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므로, 허용된 위험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한해주는 원칙으로서 원래 교통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으로 스스로 교통 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들은 다른 교통관계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한 것 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 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 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도로교통의 범위를 초월하여 다수인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모든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 의무 한계를 확장하는 원인으로 발전되어⁷⁾식품사고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것 인지가 문제로 된다.

예컨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첨가물로서 성분 규격이 명백한 제품을 사용 하였는데 제품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표시와 전혀 다른 위험한 성분의 제품이 들어있었기

6) 신 과실범설(위구감설)은 일본에서 발전된 이론으로서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며, 이는 결과 예견가능성은 구체적인 결과까지는 예측 할 필요는 없고 무엇인가 명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의 위구심(불안감)으로도 족하고 그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 범위 내에서 결과회피 의무를 과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7)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합한 행위를 신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1935년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확립 되고 전파 된 이론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식품 제조업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항이다(손 기식, 1997:17).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식품범죄에 대한 신뢰의 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식품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직접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범죄에 신뢰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토 되어야 하겠다.

3. 인과 관계의 문제

일반적으로 선행사실과 후행 사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있는것, 즉 어떤 결과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결과와 행위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보통 인과관계 또는 인과성 이라한다. 식품사고에 있어서 민 형사 간 에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이다. 특히 식중독 사고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그 피해가 어느 식품제조업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다른 행위자의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는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손 기식, 1997:21). 그러나 통상 피해와 식품의 결합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쉽게 해명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식품에 발생한 결합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일종의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리나 개연성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고, 단순히 개연성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입법 정책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나 그대로 적용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금지착오의 문제

우리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 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품범죄의 경우는 다른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단속법규의 전문성·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법규의 내용에 대한 부지나 오해가 있어 죄가 되는지 모르는 금지착오에 의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다(서울지방검찰청, 1995:39). 그러나 식품범죄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자의 금지착오 주장에 대하여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지착오의 법리가 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V. 식품 범죄 실태 및 문제점

1. 식품안전 관리 체계중복

우리나라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들에 대한 정부관리 주체는 제각각으로 정부 8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식품사고가 발생하면 부처 간 처방이 나오기 쉽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원료상태의 농산물과 수산물은 농림부와 해양 수산부가 각각 관리하지만 조금이라도 가공이 되면 식약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일부품목은 배합 비율 등에 따라 담당부처가 달라지기도 한다.⁸⁾

또한, 전국 100만 여개에 달하는 식품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선 시군구가 맡는 등‘업체 따로 제품 따로’관리 되는 것도 문제점 이라 할 수 있다(조선일보,2004).

<표2> 주요 식품 관리부처

식품 명	관리부서
꽃게	어시장꽃게 (해양부) 포장된 꽃게 (식약청) 게맛살 (식약청)
소갈비	정육점 소갈비 (농림부) 냉동포장소갈비 (식약청)
사과	사과 (농림부) 사과주스 (식약청)
계란	계란 (농림부) 계란빵 (식약청)
우유	우유 (농림부) 우유성분49%음료 (식약청)
기타	쌀 (농림부), 떡 (식약청) 양주 (국세청), 소금 (산자부) 밀가루 (농림부), 샘물 (환경부)

2. 식품 범죄에 대한 처벌 경미

식품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고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률 은 평균1%

- 8) 2004년 발생하였던 불량만두 사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 담당이지만 고기가 50%이상 들어간 ‘고기만두’는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리법도 따른다. 또한 한 백화점 안의 정육점 돼지고기와 포장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됐다면“농림부직원은 정육점 고기만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청)직원은 포장육만 조사”하는 관리주체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있다. 2005년 경우 식품위생법 위생법 위반사범은 총 15306명 이었으나 이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117명 (0.8%)에 불과했다. 반면에 절대다수인 11063명(72.3%)이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재산 형을 받았고, 이어 기소유예2166명(14.2%), 기소중지236명(1.5%)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식품범죄는 경범’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과징금 역시 영업 이익보다 훨씬 적어 업자들은 적발되더라도 불량식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조선일보,2004).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7년이다. 따라서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⁹⁾

<표3> 식품범죄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2005년)

(단위: 명,%)

구분 죄명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타		
식품 위생법	15,306	11,180	117	11,063	3,810	2,166	1,644	236	80
	(100)	(73.0)	(0.8)	(72.3)	(24.9)	(14.2)	(10.7)	(1.5)	(0.5)

※자료 : 법무연수원(2006), 범죄백서 참조

3. 식품제조업체의 자격기준 미흡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에는 식품제조 영업허가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허가를 맡아야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경우 현행 신고제를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 한때에는 허가 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하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대판2000.3.24, 97수 12532), 식품제조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영세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식품사고가 영세업체에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는등 식품 제조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 하여야한다.¹⁰⁾

9) 중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 가짜 술을 만든 주류업자 를 사형에 처한데 이어 최근에는 가짜분유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식중독과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는 등 식품 환경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불량식품을 살인· 교통사고와 함께‘3대 공공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0) 미국의 경우 엄격한 제조공정관리와 시설과 인력조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 G M P(foo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적정제조기준) 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불허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4. 단속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

국민의 건강 기대 욕구가 증대되면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과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선현장의 업무수행은 시군의 위생업무 담당인력 3-4명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 위생업소들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관리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인력부족과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형성(영업신고수리, 업소지도점검, 신고 민원 처리 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는 개인별 적발실적을 인사고과 성적에 반영하고 있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에 해당하는 주요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실적은 많은 편이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이 전체단속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 풍속영업행위단속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사례가 경찰공무원이 62.3%로 나타나고 있는 등 단속을 빙자한 부패개연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반부패특별위원회:2000).

5.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비효율적 관리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사업장에 대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여부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 타 업종 과 동일하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는 타 업종에 비해 용이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또한 수입식품 판매업체의 신규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해, 시설조사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조사를 위한 인력 분배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분야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이래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그 종류와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검사시설과 장비·인력 및 기준이 미처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식품검사와 관련한 각종법령 및 지침들의 애매한 표현으로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져 부패발생의 빌미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식품검사 시간단축 및 정밀검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업주-공무원간 부패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반부패특별위원회:2000)

<표4> 식품위생 위반사범 발생·검거현황(1996년~2005년)¹¹⁾

구분 년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검거건수	검거 율(%)	검거인원
1996	51,699	7.9	51,037	98.7	53,535
1997	49,284	-4.7	49,033	99.5	51,775
1998	61,652	25.1	60,405	98.0	63,234
1999	41,565	-32.6	42,618	102.5	47,100
2000	29,704	-28.5	29,576	99.6	31,809
2001	28,934	-2.5	29,129	100.7	31,773
2002	22,691	-21.6	22,683	99.9	24,489
2003	19,362	-14.7	19,210	99.2	30,963
2004	19,848	2.5	19,583	98.7	14,562
2005	14,072	-29.1	13,703	97.4	14,405

※ 자료: 법무연수원(2006)·범죄백서 참조

6.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각종기준은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단속공무원도 이를 모두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기준을 완벽히 준수하는 업체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속공무원은 점검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규정을 하향적용하거나 중요항목위주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패행위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반부패특별위원회:2000).

VI. 식품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11) <표4>는 최근 10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1996년에는 51,699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7.9%가 증가하였고, 1998년에도 61,652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5.1%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발생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5년에는 14,072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9.1%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검거 율 은 2005년에 97.4%를 기록 하는 등 최근 10년간 평균99%의 높은 검거 율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자료는 발생건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보다는 단속실적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분석함이 타당하다.

1. 제도적인 측면

1) 식품제조업체의 자격기준강화

현행 식품제조업체의 자격에 대한 신고제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사고가 주로 시설과 환경이 미흡한 영세업체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신규 진입하는 업체에 대한 제조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6년 중국은 가짜, 저질식품들을 생산해온 식품제조업체 15만2000개를 폐쇄 한바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엄격한 제조공정관리와, 시설과 인력조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적정제조기준 (G M P)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영업허가가 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혁과 기준 강화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조업자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소비자의 주인의식이다.¹²⁾

2) 식품 안전 전담 기구(체계)일원화

식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마다 관리주체가 다르고 업무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행정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통합 기구 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식약청)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 식약청,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인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중앙 부처는 자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한 기관에서 최종과정까지 추적 적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 위생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하여야 한다.¹³⁾

12) 1997년 미국 오하이주의 허드슨 사는 자사의 햄버거를 먹은 소비자 15명이 병원성 대장균 감염 증세를 보이자 1만여t 을 리콜한 뒤 파산했으며 2002년 일본 최대육가공업체인 닛폰햄은 수입쇠고기를 일본산으로 위장했다가 주부들의 불매운동에 혼쭐이 났다. 즉 제조업체자들은 “먹을거리로 장난치다 가는 기업이 망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 의식은 소비자가 먼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4. 6. 14).

13) 서울시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에 대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식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시는 우선 2008년 상반기 중 식품안전과를 신설해 지금까지 식품유형이나 유통 단계별로 위생과, 농수산물유통과,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등에 분산돼 있던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식품 안전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과는 농. 수. 축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상품 등 식탁에 오르는 주요 식품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건강 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 식품 범죄에 대한 수사, 추적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과 직원들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전원에게 수사 및 사건 송치권한 등 특별 사법경찰권 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과 직원들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전원에게 수사 및 사건 송치권한 등 특별 사법경찰권 을 부여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검사 범위도 확대돼 그동안 가락, 노랑진,

3) 유통과 감시기능 강화

국제무역 자율화로 인해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각종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 위생업 소수 증가 및 불법사례는 단순한 위반에서 이제는 지능적이고 다양화, 복합화 되고 생활의 변화에 따른 인스턴트식품의 선호와 외식의존도 증가로 식품 유통과 위생관련 전담부서 및 감시 인력 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게만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식품범죄관련 단속활동을 특별사법 경찰관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자치구 행정 공무원에게 단속 활동과 함께 직접수사권을 부여하여, 위반사항을 직접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14)

4) 과다한 규제로 인한 부패발생요인 개선

현행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에 있는 성분규격을 과학적 타당성에 바탕을 두어 위생규격중심으로 관리하고 품질규격은 근본적으로 표시사항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유통기한 설정의 경우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지정업체에 대한 자체실험·평가데이터를 인정 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축소하고 자율관리를 확대함으로써 부패발생의 소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인 측면

1)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형량하한제 도입 등)

2005년도 발생하였던 쓰레기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국회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 위생법 개정으로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¹⁵⁾를 적용하고, 식품수입업을 신고

강서시장 등 도매 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 위주로 이뤄졌던 검사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야채 가게 등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또 월별로 감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많이 소비되거나 사회 문제화된 식품, 위해 우려 식품등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사방법도 획일적 기계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생산 양식별로 전문화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문제 식품에 대해선 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방법도 획일적 기계적인단속에서 벗어나 생산양식별로 전문화된 기동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 식품에 대해선 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획검사 팀’이 신설돼 그동안 분산돼 있던 수거, 검사 기능을 한데 모아 갖추고 이달 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시민단체 자치구등을 참여시켜 ‘식품안전 감시협의회’를 구성, 사회적 문제 식품 또는 신종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정보와 여론을 수렴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경향신문, 2007. 10. 2).

14) 서울시는 2008.3월부터 특별사법 경찰관리 제도를 운영, 식품안전·보건·위생, 환경 등 16개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위반사범을 강력 대처 하기위해 특별사법 경찰지원과를 신설(2008.1.1) 하였다.

15)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소속인 정 복심 의원 등 은 2007.3월 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수입·판매업자에게 형량하한제를 적용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대행업자의자격 기준을 신설, 엄격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적극추진 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 수입판매 업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엄격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우병, 탄저병, AI(조류인플루엔자)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마황, 부자, 천오, 초 오, 백 부자, 섬수 등 의 원료성분을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함께 부과토록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식품관련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숨방망이 식’처벌 때문이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형량하한 도입과 함께 식품 사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대신 부당이득의 몇 배 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도 적극검토 하여야 할 사항이다.¹⁶⁾

2) 식품신고 포상금제도 보완

현행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하는 순기능적 취지보다는 포상금을 노리는 소위‘식 파라치’를 양산하는 등 역기능이 팽배 하여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재래시장내의 소규모 생계형 노점형태의 무신고 영업이나 영세업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도 후 미 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신고 포상금은 사법 판결 후에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을 낮추는 한편 신고자1인이 1회 신고 할 수 있는 건수와 신고자의 1인의 월별 신고회수 상한선을 주는 방안 그리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식품위생법 제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방안들이 검토 보완 되어야 한다.

3. 법률적인 측면

1) 식품범죄 단속 법규상의 양벌규정 강화

식품 범죄단속 법규 위반죄의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색의 하나는 양벌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식품 위생법 제 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 77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 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고 되어있다 (손 기식, 1994). 그러나 식품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행정 제재의 경우 식품제조업체나 가공업체등 중대규모의 기업보다는 소규모내지 영세규모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

한 바 있다.

16) 사법 연감에 따르면 2006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2.1%인 36명에 불과 했다. 이중 법정최고형(징역3년)을 받은 사람은 한명에 불과하고, 2.3심에서 아예 없다.

다(남 재봉, 1998). 따라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세기업자나 종업원만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경우, 악의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려는 실력자인 법인을 방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권 문택, 1981), 단속과 수사의 초점을 영세식품위생 관련업소의 행정 법규위반에서 대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범죄행위로 옮김으로써 형사법적 규제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식품범죄 진압에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손 기식, 1997).

2) 식품사범 신상공개법안 강구

정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거리와 관련된 범죄는 어떤 처벌을 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 가운데 식품 관련 범죄는 참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처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식품범죄 관련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요지를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후 게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 도 바람직하다.¹⁷⁾

V. 결론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는 등 독자적인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서울시에서는 식품 안전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위생과나 농수산유통과, 보건환경연구원등에 분산 되어 있던 식품 안전 감시기능을 일원 화 하기 로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대량 생산한 식품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먹 거리와 관련한 식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열도를 소란스럽게 하였던 중국산 농약 만두사건과 같이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범죄 가운데 식품 관련 범죄는 참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여러 범죄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먹을거리와 관련된 범죄는 어떤 처벌을 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17) 2004년 김영춘 의원(열린 우리당), 전 여욱의원(한나라당)등 여야의 의원 31명은 ‘쓰레기만두’파동과 관련, 식품 범죄관련자의 성명·연령 직업등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관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식품 안전 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등 8개 부처가 책임 부서와 관할의 문제로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 등 해당 공무원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한 식품 행정의 단면들이 나타나고 있어, 각종 부조리와 부작용은 물론 일사 분란한 대응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행정을 총괄할 식품 안전처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상태로 통합이 진전을 못 이루는 실정으로, 신속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국내에 반입되는 엄청난 양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입검사를 실시하고 ‘숨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처벌에 있어서도 법규를 대폭 강화하여 식품범죄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유통과 감시기능도 강화 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범죄와 부패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범죄와 부패발생소지가 있는 제도·정책·법률적인 측면의 미흡함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개혁적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 갖가지 정책이나 제안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공무원과 식품제조 유통업자들의 윤리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종원.(1981).“과실범의 구조”, 형사법강좌 I,338.
- 남재봉.(1985). “범죄생산과 관련된 요인의 분석을 위한 예비적 검토” 고려 사회학 연구회. 서울. 고려사회학 논집(2). 25-46
- _____. (1990). “농업종사자의 범죄구성의 변화-1964-1984년간을 중심으로” 고려사회연구회. 서울. 고려사회학 논집 제 5집 99-126.
- _____. (1998). “식품위생법 위반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5권2호, 10-22.
- 대검찰청.(2005). 「과학수사편람」.
- _____. (1997). 「범죄분석」 통권 제130호.
- 명노승.(1988).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식품공업」 95호, 65-83
- 법무연수원(1988).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 _____. (2006). 「범죄백서」.
-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 _____. (1996). 「보건복지통계연보」.
- 반부패특별위원회(2000).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방안」.
- 법원행정처.(2006) 「사회연감」.
- 박기석(2000).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10권, 21-42.
- 심영희(1988). “식품범죄에 관한 범죄사회적 분석”, 「식품공업」 96호, 37-59.

손기식(1997).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 문제”, 「법조」 487권, 5-33.

서울지방 검찰청(1995). 「식품범죄연구」.

「조선일보」 (2004). “먹기가 겁난다”. 6. 14:3

Box S.(1983). Power. Crime. and Demystification N.Y. Tavistock Publications

Hills S. L.(1980). Demystifying Social Deviance N.Y. McGraw Hill

Schelling Thomas C. (1970). “Economics and Criminal Enterprise” in M. E. Wolfgang.Savitz L. N. Johnston.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N.Y.John Wiley and Sons.

저자약력 : 저자 이만중 은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본부 헌병과장, 국방부합동수사단 수사과장, 공군사관학교 외래교수 및 항공 우주법 연구원들을 역임하고 전역(공군대령) 현재는 호원대학교 법 경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군사법학회, 한국테러 연구학회, 민간조사학회 회장과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군사 법, 범죄학 및 형사정책, 테러, 민간조사 분야이다

저자약력 : 저자 최은희는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리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호원대학교 식품외식조리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민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음식 표준화사업자문위원. 농업기술원 떡 연구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한국음식, 전통병과, 궁중음식, 조리학 분야이다.